

사드갈등과 한·중관계의 신장타이(新常态) -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

한석희 ■ 연세대학교

〈국문요약〉

사드갈등으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유지해왔던 양국 우호관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사드갈등의 충격으로 한·중관계가 사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포스트 사드 한·중관계가 신장타이에 진입했다는 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 글은 왜 포스트 사드 한·중관계가 신장타이에 들어서야 하고, 또 어떤 점에서 신장타이의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단 사드갈등은 지난 25년 동안 양국관계에서 누적되어온 정치·경제문제들과 혼재되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포스트 사드 한·중관계의 복원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이 변화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밀착을 통해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추구했었고, 그 바탕에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계산이 깔려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또 사드갈등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및 태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포스트사드 신장타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벗어난 대북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로 중국은 사드배치를 철회해야만 한·중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드배치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이 사드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포스트사드 한·중관계 회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중동반자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주제어: 사드, 신장타이, 박근혜, 시진핑, 한미동맹, 한중 전략적 동반자

I. 서 론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 실험 이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문제가 첨예한 갈등이슈로 부각되면서 한·중관계는 역사적 전환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2년 수교 이후 25년 동안 경제·통상·사회·문화 분야에

서 우호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및 외교적 냉대로 한·중 관계는 큰 타격을 받았고, 그 결과 교역, 투자, 인적교류 등에서 8.5조원 정도의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현대경제연구원 2017). 게다가 한 연구(김지윤·강충구·이지형 2017b)에 따르면 사드갈등 과정에서 나타난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 저하는 지난 25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우호적 상호인식을 상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양국관계 발전에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¹⁾ 물론 2017년 10월 31일 한·중 양국이 관계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뒤이어 12월 14일 한·중 정상회담으로 미중유의 갈등관계를 일단락 지어보려는 노력을 시도해 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한·중 간의 사드갈등을 말끔히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예경 2017; 외교부 2017/10/31).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드갈등이 1년 10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²⁾ 그 파급효과는 지난 25년 동안 양국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던 상호 우호관계의 구조적 틀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했으며, 따라서 앞으로 사드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한·중관계는 사드갈등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는 점이다(이성현 2017; 『중앙일보』 2017/07/04). 특히 사드갈등의 시작은 표면적으로는 한·미의 무기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이슈에서 비롯되었지만, 갈등의 전개 과정을 보면 지난 25년 동안 양국관계에서 누적되어온 정치·경제문제들이 사드문제로 혼재되어 갈등이 증폭되고 더 복잡하게 발전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신창타이(新常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창타이’는 중국경제의 저성장과 관련하여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뉴 노멀(new normal)’의 중국식 표현이다. 강준영(2017)은 신창타이를 새로운 기준을 찾아야 하는 변화의 시대라고 정의하면서 신창타이가 경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한·중수교 25년 및 사드갈등 이후의 한·중관계가 신창타이가 될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즉 신창타이는 경제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변화의 시대에 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찾아

1) 2017년 1월 4.31점을 기록했던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중국의 사드보복이 본격화된 3월에는 3.33점까지 급락하였다.

2)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미국과 사드논의를 시작했던 2016년 1월을 사드갈등의 시작시점으로, 또한 한·중 양국이 합의문을 도출했던 2017년 10월 31일을 사드갈등의 종결시점으로 정한다.

야만 하는 새로운 기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드갈등 이후 한·중관계의 복원은 지난 25년 동안 한·중관계에서 나타났던 정치·경제문제들을 보완함과 동시에 포스트 사드 한·중관계의 신장타이를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사드갈등의 시작은 한·중간 신뢰부족 및 소통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했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상징성에 비해 현실적인 내실화가 부족했던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드배치가 갖는 한·미동맹의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 한·미동맹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해왔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의 한국배치 및 운용이 향후 한·미동맹의 강화·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배치된 사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한·중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북·중관계를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한·중의 협의 속에서 북한을 관리하고자 했던 기존의 노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명되었기 때문에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한·중협력의 틀을 모색해야 한다.³⁾ 종합해 보면 사드갈등 이후의 한·중 외교·안보환경은 그 이전과는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포스트 사드 시대의 한·중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사드 한·중관계가 그 이전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관계로 발전되어갈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자 한다. 물론 한·중간의 지리적 인접성과 그 간 교류·협력의 긴밀성을 고려해볼 때, 한·중 외교·안보관계가 과거와 완전히 절연된 형태로 갈 수는 없다. 다만 사드문제가 결국에 해결된다고 가정한다 해도 한·중관계가 ‘원상회복’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착안하여 사드 이전과 이후의 한·중관계는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한·중관계의 신장타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사드갈등의 시작과 한국 대중전략의 문제점

사드갈등은 근본적으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산물이지만(中国评论新闻网

3) 사드 및 한중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는 구본학(2015), 이민자(2017), 김태호(2017), 이동률(2017), 박휘락(2015) 등을 참조. 특히 박근혜 정부 시기 한·중관계에서 나타난 북한·한반도 문제, 대북 원고근공 어프로치, 중국역할론,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조화에 대한 포괄적 논의는 서승환(2017) 및 이문기(2016) 참조.

2016/07/22; 고명현 2016) 보다 직접적으로는 한·중 간에 누적된 외교·안보적 문제점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사드배치결정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중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박근혜 정부의 대중·대북정책 좌절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초기 “균형외교”를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여기에 양국 지도자간의 개인적 우의와 상호교감이 더해져 최상의 한·중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김재철 2017; 이문기 2016; Han 2012). 특히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은 이러한 한·중 밀월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행사였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중국에 “경사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낼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었다(Chung and Kim 2016). 당시 박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눈총을 받아가면서 열병식에 참석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였다(Tiezzi 2015). 물론 열병식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대중외교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진정한 시험(true test)은 북한이 다음 도발에 나섰을 때라고 주장하는 유보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박대통령은 열병식 참석을 통하여 의도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Cha 2015/10/9).

이러한 우호적인 한·중관계를 고려하여 사드배치문제도 유보되었다. 사실 한반도에 대한 사드배치 문제가 시작된 것은 2014년 6월이었다.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M. Scaparrotti) 장군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 진화하는 만큼, 대한민국 방어를 좀 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에 사드를 전개하기 위한 초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조선일보』 2014/6/3). 그의 발언 후, 국내에서는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비등하였고(김재한 2016), 중국에서는 주요 당국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였다.⁴⁾ 중국의 적극적 반대와 국내의 갈

4) 그 예로 2015년 2월 4일 창완취안(常万全) 중국 국방부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민구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고, 같은 해 3월 16일에는 류젠차오(刘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한국을 찾아 "(사드 문제에 관한)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해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같은 해 5월 31일에는 쑨젠궈(孙建国) 중국군 부총참모장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서 한민구 장관에게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였다(연합뉴스 2016/7/8).

등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란 명분을 내걸고 사드배치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였으며 공식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바도 없고, (미국과) 협의한 바도 없으며, 결정된 것도 없다”는 ‘3무(無) 원칙’을 고수하면서 사드 배치를 미루어왔다(『중앙일보』 2015/03/12; Lee 2015).

그러나 1년 8개월 동안 사드배치를 미루어왔던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월 북한의 기습적인 제4차 핵 실험을 계기로 사드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박 대통령은 2016년 1월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 발표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가며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사드배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조선일보』 2016/1/14; 『세계일보』 2016/1/29).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 실험 이후, 왜 갑자기 사드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을까? 그 원인에 대한 한·중 양국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중국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도입결정을 중국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고 한국정부가 갑자기 사드배치 결정을 했으니 결과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마치 중국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Swaine 2017).⁵⁾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사드결정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 시, 박대통령과 시주석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박·시 두 정상은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긴밀한 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체적인 회담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박대통령의 ‘텐안먼 외교’가 시 주석의 체면을 세워주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박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억지와 평화통일에 대하여 시 주석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은 설득력이 높은 정상회담 성과라고 볼 수 있다.⁶⁾ 그리고 4개월 뒤 북한은 제4차 핵 실험을 강행하였고 박대통령은 약속한 바와 같이 시주석과의 소통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시주석은 박대통령의 전화요청에

-
- 5)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어냄(解铃还须系铃人)”으로써 “양국관계의 목에 박힌 가시를 조속히 빼내기를 희망한다(尽快拔掉卡在两国关系咽喉中的这根刺)”고 언급하면서 한국이 결과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우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왕이의 언급은 FMPRC(2016/2/13) 참조.
- 6) 박대통령은 방중일정을 마치고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다. 박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좋은 성과가 많았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중이 이번처럼 협조를 계속 해나가자는 의지를 표시했다’고 정상회담의 성과를 언급하였다(『조선일보』 2015; 『중앙일보』 2015/09/05).

무응답으로 일관함으로써 정상 간의 전화소통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 게다가 중국은 긴급한 안보관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국방부 간의 소통과 공조를 위해 설치했던 군사 핫라인까지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긴급한 안보상황에서 중국이 보여준 한국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가 한국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Tiezzi 2016; *New York Times* 2016/01/13; *Korea Time* 2016/02/05; 『연합뉴스』 2016/01/07).⁷⁾

그렇다면 사드갈등 이후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대중협력은 지속 될 것인가? 물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한 한국이 향후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일정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BBC News* 2017/9/5). 그러나 사드갈등 이후 한국의 대중외교·안보협력은 그 성격과 방향에서 사드 이전과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시진핑 주석의 대북특사인 쑹타오(宋濤)가 결국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한 점이나 뉴욕타임즈 컬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Nicholas Kristof)의 북한방문기에서 나타난 북한의 대중태도를 검토해 볼 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으며,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가능한 영향력을 모두 사용하지는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⁸⁾ 따라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북한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과거의 접근법은 효용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리스크를 걸면서까지 한·중관계의 밀착에 치중했던 전략적 시도가 좌절되면서 결국 한국이 어떤 노력을 해도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넘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이로써 중·북관계의 견고성에 따른 한·중관계 발전의 한계성이 좀 더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Jin 2016).

7) 북한의 4차 핵 실험 이후 한 달 동안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어떠한 외국지도자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고 있지 않다. 또한 소수이긴 하지만 중국의 몇몇 학자들은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만은 받았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중국학자와의 인터뷰(중국 상하이, 2016/7/19).

8) 중국대외연락부 부장인 쑹타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2017년 11월 17일-20일 북한을 방문하였다. 특사임에도 불구하고 쑹타오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점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시진핑 위원장에 대한 고의적인 모욕(deliberate snub)이라고 볼 수 있다(Wood 2017; *South China Morning Post* 2017). 2017년 10월 북한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프 기사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오해 중 하나로 중국이 대북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New York Times* 2017/10/12).

따라서 포스트 사드 한·중관계에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한·중협력은 적어도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성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아야 한다.

III. 사드배치와 한·중 외교·안보협력의 제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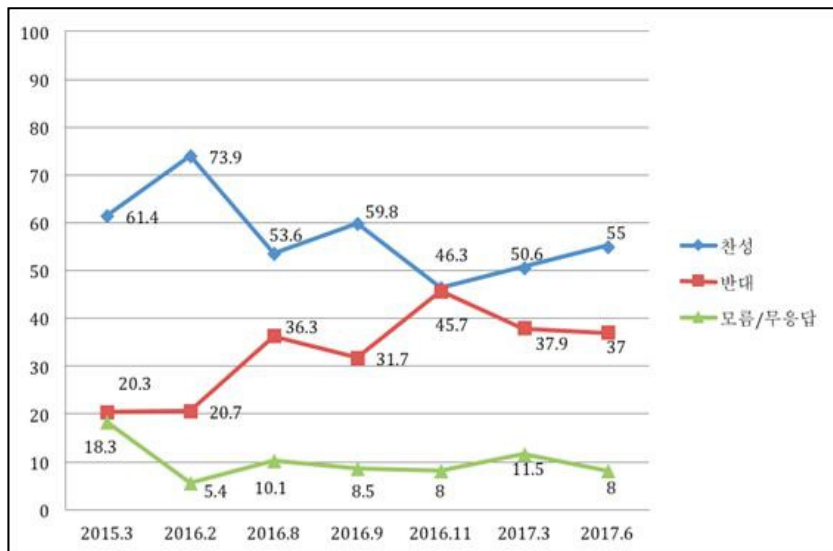
2016년 1월 박 대통령의 사드배치 언급 이후 우리 사회 내에서는 한편으로는 사드배치와 관련된 찬반논란이 증폭되었던 반면, 또 한편으로는 우여곡절 끝에 사드의 실질적인 배치가 일단락되었다. 그 과정을 보면 우선 한·미 양국은 박 대통령의 언급에 이어 사드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발표하였으며(2016년 2월 7일), 같은 해 7월 8일에는 양국 협의에 이은 사드배치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국방부도 롯데 소유의 성주골프장을 사드부지로 발표함(9월 30일) 이후 5개월 뒤에 롯데와 사드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2017년 2월 28일), 사드배치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적 조치에 이어 주한미군은 2017년 4월 26일 성주골프장에 사드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를 실질적으로 배치하였으며, 북한의 6차 핵 실험 직후인 9월 7일에는 나머지 4기에 대한 배치도 마무리하였다(『연합뉴스』 2017/10/31).

그러나 문제는 한반도에 이미 배치된 사드가 한·중관계 발전의 상징적 걸림돌이 되었다는 점이며, 따라서 향후 한·중 외교·안보관계가 사드 이전의 협력적·우호적 관계로 회복되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우선 중국정부는 사드갈등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해 “일관적이고 명확한(一贯的 明确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사드철수만이 사드문제의 유일한 해결방안이라는 점을 확실히 표명하고 있다(人民网 2016/10/2). 그러나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사드철수를 고려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한·미 양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한국국민, 그리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없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사드배치를 번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16/7/8).

또한 <그림 1>에서 보듯이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반대보다 높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2016년 11월을 기점으로 지지와 반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사드배치를 번복하기 힘든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사드 한·중관계에서는 사드철수를 목표로 한 중국의 집요하고도 노골적인

압박·위협·설득이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한 양국 간의 긴장국면이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한·중간의 협력도 당분간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루기 힘들다고 보인다.

〈그림 1〉 사드배치에 대한 한국인의 의견 (단위: %)



<출처> 여론연구프로그램, “새 출발점에 선 한미관계: 대미(對美) 여론과 한미관계 시사점,” ASAN Report, 2017년 6월. <http://www.asaninst.org/contents/%ec%83%88-%ec%b6%9c%eb%b0%9c%ec%a0%90%ec%97%90-%ec%84%a0-%ed%95%9c%eb%af%b8%ea%b4%80%ea%b3%84/>

사드배치가 포스트 사드 한·중 외교·안보관계에서 여전히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은 최근 사드갈등 해결을 위한 양국의 협의과정에서도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017년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를 통하여 사드갈등을 일단락 짓고자 하였으며, 그 핵심적인 부분은 강경화 장관이 표명했던 “3不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⁹⁾ 그러나 “사드합의”를 사드갈등의 봉인이라고

9) 2017년 10월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한국은 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하지 않고; ②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으며; ③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한국정부의 약속(承諾)이라고 강변하면서 한국 측이 3不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것을 촉

인식하는 한국의 입장과는 달리 중국은 사드갈등은 아직 진행형이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중국은 사드갈등의 단계적 처리를 주장하면서 사드합의는 문제해결과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박철희 2017). 한·중협력의 실제적 복원과 관계개선을 위한 문제인 대통령의 중국방문(2017년 12월 13일·16일)도 결국 사드갈등을 깔끔하게 해결하지는 못했다. 시진핑 주석은 문제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천명(重申)하고 한국측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주기(妥善處理)를 바란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사드갈등의 단계적 처리를 재확인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人民日报 2017/12/15).

사실 사드배치와 관련된 중국과의 갈등은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의 조화라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면서 경제발전을 지속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여 안보확립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안미경중(安美經中)전략은 어쩌면 필연적인 외교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¹⁰⁾ 그러나 미국의 상대적 침체가 장기화되고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면서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고 또한 역내 국가들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대리경쟁(proxy competition)이 구조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정재호 2017). 특히 사드배치와 관련된 한·중간의 갈등은 한국이 처해있는 이러한 딜레마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중국은 사드 논란을 빌미로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의 ‘악한 고리’인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 미국은 ‘한국의 사드 문제 처리가 장차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 서게 될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김희상 2016).

결국 사드와 관련된 세 가지 조건-사드배치 완료, 중국의 집요한 사드철폐 압박, 그리고 한국정부의 사드배치 반복 불가-은 포스트 사드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시진핑 시대의 미·중관계가 협력보다는 경쟁을 노골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문제는 한·미동맹과 한·

구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후 한국측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입장표명(表態)이라고 표현을 바꾸었다(『조선일보』 2017/11/3).

10)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입장에서 한·미, 한·중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구본학 2015)를 참조.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주철기 2016; 남창희·이원우 2011)을 참조.

중 동반자관계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¹¹⁾ 따라서 포스트 사드 한·중 외교·안보관계에서는 이미 사드가 배치된 상황에서 한·중관계를 어떻게 증진시켜갈 것인지, 그리고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관계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IV. 포스트 사드 한·중 외교·안보관계의 신창타이

사드갈등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스트 사드 신창타이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측면이 있지만 사드갈등 과정에서 나타난 한·중관계의 구조적 변화가 양국관계를 그 이전으로 돌려놓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포스트 사드 한·중 외교·안보관계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논의해보는 것은 적절한 시도라고 보인다.

그 첫째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간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영향력에 의존하는 전략은 지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중 간의 긴밀한 외교공조를 통하여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결국에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의존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그 뒤를 이은 중국과의 공조실패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대중정책은 좌절을 겪게 되었다(서승환 2017; 이문기 2016). 따라서 포스트 사드 시기 한·중관계 복원과정에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간의 새로운 협력전략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일반적으로 의존하는 전략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사실 사드갈등이 없었더라도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의 방향은 재고되어졌어야 했다. 중국의 대북영향력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는 이제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이고, 특히 2014년부터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반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을 포기하는 전략을 선택하기 보다는 완충지대로서 북한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11)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로 지칭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중국과의 대립각을 강화하고 있다(White House 2017).

북한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정치적·경제적 지원을 줄여나가는 전술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Scobell 2017). 게다가 미국의 요구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현 대북태도를 고려해 볼 때, 당분간 중·북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특히 대립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는 중·북관계와는 달리, 2018년의 시작과 함께 남북한 간에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두고 대화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문제와 관련된 자국의 태도 및 역할에 변화를 주는 것은 어찌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인다(Kang 2018).

따라서 중국은 과거 6자회담에서와 같이 북한문제에 대하여 주도적 역할을 추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반도 상황을 보조적으로 관리하는데 집중하면서 지역 안보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18년 1월 11일 한·중 정상 간의 통화에서 시 주석이 언급한 것처럼 한편으로는 평창 올림픽을 “남북대화를 시작하는 계기”이자 “한반도 정세를 호전시키는 시작점(开端)”으로 환영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유관국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였다(中国外交部 2018/1/11). 그러나 중국은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남북대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혹시나 중국이 한반도 상황에서 따돌림(甩开)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环球时报 2018/1/10). 이와 같은 중국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한·중 외교·안보 협력관계는 과거 중국의 대북영향력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에서 탈피하여 보다 동등하고 호혜적인 협력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향후 한·중협력관계는 북한의 비핵화에 방점을 두고 진행되어 갈 필요가 있다. 일단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대북제재 효과는 중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비핵화의 의지가 전혀 없는 북한을 상대로 “쌍중단(双中断), 쌍궤병행(双轨并行)”을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보다는(中国新闻网 2017/11/16; 中国外交部 2017/3/8)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중국에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지속적인 제재를 격려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남북접촉을 통하여 북한을 설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유엔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압박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드갈등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힘든 이슈이기 때문에 포스트 사드 한·중관계 발전도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 발전방향도 한·미동맹과

한·중등반자관계의 조화라는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국은 사드갈등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사드배치 철회만이 한·중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²⁾ 이러한 중국을 상대로 한국은 사드철회 없이 한·중관계 개선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며 따라서 사드갈등 이후 한·중관계의 회복에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드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대폭 하락한 것도 한·중관계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돈독한 한·중관계를 과시했던 2015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사드갈등이 절정에 이르렀던 2017년도 對中 호감도는 거의 절반 수준에 머물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통계수치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한국인의 대중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중국이 사드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강경대응을 이어간다면 한국인들의 대중 인식은 더욱 악화될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 회복에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김지윤·강충구·이지형 2017b; 원동욱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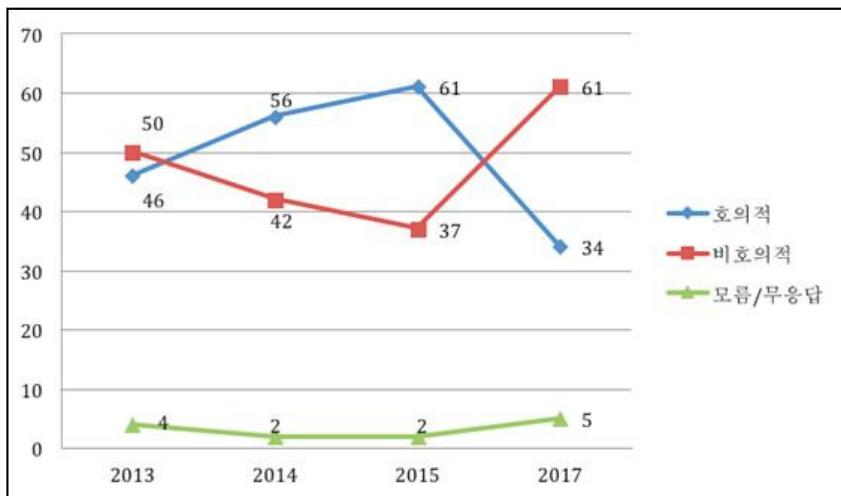
또한 사드갈등으로 인한 한국인들의 對中 호감도 하락은 결국 한국의 협력대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을 더 선호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아산정책연구소는 미·중 대결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한국이 결국 어느 나라와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그 조사결과 과반수이상의 한국인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중국보다 미국을 협력대상국가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중관계가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였던 2016년 초에도 중국을 선택한 비율이 32.6%에 불과하였다는 점은 전통적으로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중국에 비해 미국과의 협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¹³⁾ 또

12) 중국은 10월 31일 사드합의 이후에도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자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사드철폐가 사드갈등의 유일한 해결방안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드문제의 단계적 처리를 주장하면서 사드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中國外交部, 2017/11/22).

13) 한국인이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에 대한 아산정책연구소의 분석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오랜 기간의 동맹을 통해 신뢰가 구축되어 있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가 한창 좋을 때에도 중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본 한국인은 얼마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국가라는 인식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김지윤·강충구·이지형 2017a).

한 2016년 조사결과(미국 59.5%; 중국 32.6%)에 비하여 사드갈등이 심각했던 2017년의 결과(미국 67.3%와 중국 22.3%)에서 미·중간의 격차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사드갈등 이후 미국과의 협력을 선호하는 한국사회 내의 분위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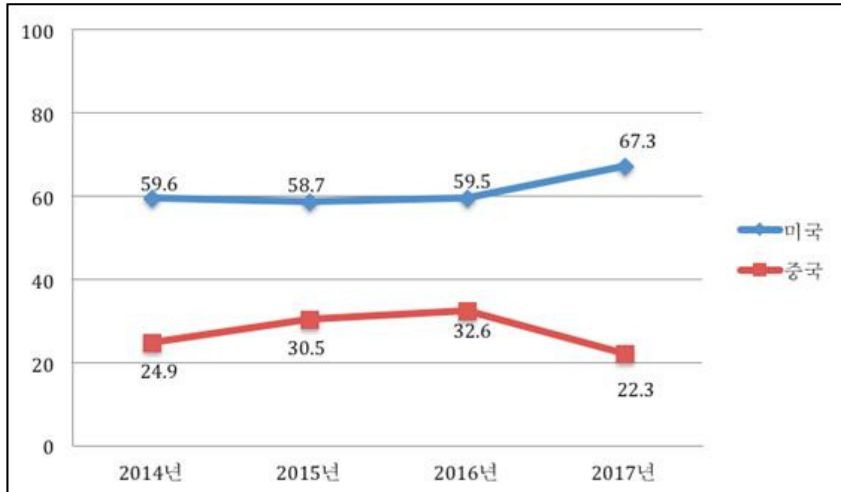


<출처> Pew Research Center, "Globally, More Name U.S. Than China as World's Leading Economic Power," July 2017. <http://www.pewglobal.org/2017/07/13/acknowledgements-views-on-china> 의 데이터를 재구성.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포스트사드 한국외교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가뜰이나 한·중관계가 위기인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한·중관계에 더욱 부담을 주는 조치로 보일 수도 있으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현 상황은 한·미동맹 강화가 한·중 동반자관계를 견인해갈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사드갈등을 풀기 위한 문제인 정부의 저자세 대중접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사드갈등해결에 유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물샷틈없이 공조를 하고 있다는 레토릭과는 달리 한·미간에 정책적 괴리가 나타나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중국도 한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향후 대중관계를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레버리지로 활

용하고,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한·중관계를 관리해야 한다(『연합뉴스』 2017/11/29; 『조선일보』 2014/7/18).

〈그림 3〉 한국의 협력대상 국가 (단위: %)



<출처> 여론연구프로그램, “새 출발점에 선 한미관계: 대미(對美) 여론과 한미관계 시사점,” ASAN Report, 2017년 6월. <http://www.asaninst.org/contents/%ec%83%88-%ec%b6%9c%eb%b0%9c%ec%a0%90%ec%97%90-%ec%84%a0-%ed%95%9c%eb%af%b8%ea%b4%80%ea%b3%84/>

그러나 전통적으로 한국은 안정적인 외교·안보관계를 유지해가기 위하여 한·미,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추구해왔다. 특히 한국의 미래 안보와 경제에 미국과 중국은 어느 한 쪽도 포기할 수 없는 협력대상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두 강대국 중 한 국가와의 관계증진을 위하여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을 지양하고 미·중 모두와의 관계강화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사드가 이미 배치된 상황에서 중국이 사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한·중관계의 회복 내지 정상화는 상당한 시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포스트 사드 한·미동맹의 강화는 거창한 이벤트를 통하여 중국을 자극하기 보다는 한·미간의 정책적 동기화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정상 간의 밀접한 소통과 실무자간의 원활한 정책조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아울러 한·중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원활하게 발전하는 것은 중국으로 하여

금 한·중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한·중 간 경제교류의 정상화가 한·중관계 개선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양국 관계개선에 나서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한국과 중국은 수교 후 25년 동안 미증유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으나, 한국의 사드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급격한 관계악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의 회복 내지 정상화는 쉽게 이루어 질 것 같지 않다. 일단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국정부의 노력(2017년 10월 31일의 합의문 및 뒤이은 한·중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사드갈등이 확실히 종결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관계정상화까지 매우 힘든 과정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사드배치의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한국의 입장과 사드배치의 철회만이 갈등회복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중국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유지하는 한, 사드배치에서 비롯된 양국갈등은 포스트 사드 한·중관계 발전에 구조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조적 제약요인이 사드갈등 이후 한·중관계가 그 이전의 상황과 차별화되는 구체적 요인이고 신장타이를 준비해야 하는 근본적 원인이기도 하다.

포스트 사드 한·중 외교·안보관계를 그 이전과 차별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의 변화이다. 전통적으로 핵 도발을 포함한 북한문제가 한·중 협력관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중·대북전략이 한·중 밀착관계를 통하여 중·북관계를 이완시키고 결국에는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는 점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제4차 핵 실험과 함께 이러한 시도는 좌절되었고 동시에 중국안보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재확인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를 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의 새로운 협력기반 모색은 포스트 사드 한·중 외교·안보관계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핵심적 사안이다. 특히 최근 나타나고 있는 중·북간의 상황변화 - 즉, 중·북간의 고위급 교류가 거의 중단상태에 있고, 과거와 달리 중국이 유엔결의에 따른 대북제재를 상대적으로 충실히 실천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등 - 을 고려해 볼 때,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모델은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사드 시대의 한·중관계를 새롭게 정립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한·중수교 이후 25년 동안 북한문제에 대한 접근과 경제발전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그러나 중·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상황이 변화하고, 또 사드갈등과정에서 중국의 민낯을 재인식한 지금 국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사드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드갈등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제2의 사드”를 방지할 수 있는 외교적 합의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일본, 동남아, 인도, 오세아니아 국가들과의 외교적 다변화에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문 논문

- 강준영. 2017. “韓·中수교 25年: ‘新常态’시대의 도래.” 『중국학연구』 82, 203-227
- 고명현. 2016. “사드(THAAD): 불가피한 선택.” 『이슈브리프』 7월 15일.
- 구분학. 2015.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조화.” 『新亞細亞』 22(4), 135-160.
- 김지윤, 강충구, 이지형. 2017. “미중 패권경쟁 속 한국인의 사드(THAAD) 인식.” 『이슈브리프』. 아산정책연구원. January 23.
- _____. 2017.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와 급변하는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이슈브리프』. 아산정책연구원. March 19.
- 김예경. 2017.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내용분석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376호 (11월 6일).
- 김재철. 2017. “한중관계, 25주년의 성찰.” 『정세와 정책』 9월호.
- 김재한. 2016. “통일·안보 정책의 정치화와 사드 배치 논란.” 『통일전략』 16(4), 9-38.
- 남창희,이원우. 2011. “한국의 동맹네트워크 확대와 한중관계 발전 병행 전략.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시론(詩論).” 『국제관계연구』 16(2), 5-36.
- 박철희. 2017. “중국에 대한 ‘3불(Three No)’ 입장 표명: 지속 가능한가?”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86호 (12.05.).
- 박휘락. 2015.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 동맹이론과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新亞細亞』 22권 4호 (겨울), pp. 60-83.
- 서승환. 2017. “박근혜정부 시기 한국의 대 중국 전략적 사고에 관한 고찰.” 『아세아연구』 60(2), 114-149.
- 원동욱. 2018.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중관계 발전방안.” 『JPI PeaceNet』 2018-2.
- 이성현. 2017. “사드 해법은 왜 ‘차선택’을 선택해야 하는가?” 『CSF 중국전문가 포럼』 2017-64.
- 주철기. 2016.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건설적으로 양립 가능.” 『성균차이나브리프』 4(3), 12-20.
- 정재호. 2017. “총체적 평가와 제언.” 미중관계연구센터(편). 『미·중 사이 한국의 딜레마: 사례와 평가』. 서울: 도서출판 코보, 93-108.

영문 논문

- Chung, Jae Ho and Jiyeon Kim, 2016. “Is South Korea in China’s Orbit? Assessing Seoul’s Perceptions and Policies.” *Asia Policy* 21, 123-45.
- Han, Sukhee. 2012. “South Korea Seeks to Balance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RF Reports*, November 9.
- Jin, Kai. 2016. “3 Stages of Park Geun-hye’s China Diplomacy.” *The Diplomat*,

December 29.

- Lee, Ho-Jin. 2015. "Missile defense and South Korea: President Park's strategic ambiguity is warranted." *Brookings OP-ED*, 27 March 2015.
- Scobell, Andrew. 2017. "China and North Korea: Bolstering a Buffer or Hunkering Down in Northeast Asia?" CT-477 Testimony presented before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on June 8 (RAND Corporation).
- Swaine, Michael D. 2017. "Chinese Views on South Korea's Deployment of THAAD." *China Leadership Monitor*, Issue 52 (Winter).
- Tiezzi, Shannon. 2015. "South Korea's President and China's Military Parade." *The Diplomat*. September 3.
- _____. 2016. "North Korea Nuclear Test Reveals the Limits of China-South Korea Cooperation." *The Diplomat*. 14 January 2016.
- Wood, Peter. 2017. "Cold Winter: China's Envoy to Pyongyang Leaves without Results." *China Brief* 17(15), 1-3.
- The White House. 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Abstract

THAAD Controversies and Post-THAAD New Normal in Korea-China Relations

Sukhee Han | Yonsei University

In the wake of THAAD controversies, the Sino-Korean relations have got into an unprecedented dimension of new normal. Amicable and cooperative bilateralism for a quarter century has been damaged by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Chinese economic sanctions and diplomatic restrictions over Korea. Thereafter, post-THAAD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may not be restored to the pre-THAAD level of intimacy and cooperation. For Korea, in particular, Sino-Korean diplomatic cooperation and management on North Korea should be renewed. Korea under the leadership of Park Geun-hye has struggled to make close bilateral relations with China in pursuit of weakening Sino-North Korea ties. Unveiled during the THAAD controversies, however, China has no intention to give up Pyongyang whatsoever. Therefore, Korea has to devise a new approach to China for managing North Korea, which should not be dependent on China's influence over the North. Sino-Korean relations vis-a-vis US-Korean relations should also be reoriented. China claims that Sino-Korean relations cannot be restored properly without the withdrawal of THAAD system on Korea, while Korea insists the withdrawal of THAAD to be unthinkable. As far as THAAD deployed in Korea, Sino-Korean relations cannot be restored to the status of pre-THAAD bilateralism. Therefore, Korea should continue to develop its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hip with China, putting US-Korea alliance as the core of Korea's security and diplomacy.

Key Words: THAAD, New Normal, Park Geun-hye, Xi Jinping, ROK-U.S. alliance, Korea-China Strategic Partnership

□ 논문접수일: 2018년 1월 30일, 심사완료일: 2018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12일

